

大學評價認定制 定着의 방향과 과제

李 和 國

(大教協 評價管理部長)

오늘날 대학평가의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대학평가를 통하여 21세기를 대비하는 大學教育의 卓越性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대학평가인정제를 도입했으며, 이제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정착시켜 대학발전에 적극 활용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아직 大學評價認定制는 그 체제가 완전히 구축되지 못했으며, 따라서 대학사회는 이 제도의 운영주체, 평가의 기준과 절차, 평가 결과의 처리 등의 당면과제에 대한 슬기로운 합의를 유도해내야 한다.

1. 序 言

지난 몇 년 동안 大學評價 사업은 대학사회의 중대한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특히 1991년부터 大學評價制度가 평가의 결과를公表하고, 이를 대학의 행정 및 재정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評價認定制로 전환됨에 따라 대학사회는 대학평가에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이라 함)는 1992년에 물리학과와 전자공학과를 대상으로 評價認定制에 의한 대학평가를 처음 실시하였고, 1993년 3월에 上位圈大學이라는 형태로 평가결과를 공표하였다.

이러한 평가결과의 공표 후 대학과 언론은 새로운 대학평가제도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 중에는 “대학평가인정제가 대학 발전을 촉진하는 제도가 될 것 같다.”,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물리학과와 전자공학과와 교육여

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자체평가 연구를 통해 각 평가대상 학과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육여건 등을 철저히 점검할 수 있었다.”와 같이 새로운 평가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도 있었고 “평가대상 학과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 투입으로 다른 학과의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되었다.”, “평가인정제가 도대체 대학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겠는가?”와 같은 부정적 견해도 있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평가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고, 언론계에서는 평가인정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평가 결과를 대학의 서열로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행히 종합적으로 볼 때에 새로운 평가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더 우세하였고, 현재 각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1993년도 평가인정제 사업이 화학과와 기계공학과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大學評價認定制가 우

리의 대학사회에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대학평가의 주체, 평가의 목적·기준·절차, 평가결과와 처리 및 활용방안 등에서 보다 명확하고 합의된 의견의 수렴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大學評價認定制 定着의 方向과 課題를 탐색하기 위하여 대학평가의 역사를 약술하고, 현행 평가제도를 개괄한 다음 대학평가인정제 정착을 위한 당면과제를 논의하려 한다.

2. 大學評價制度의 역사

12세기경부터 서구 국가에서 설립되기 시작한 近代 大學은 사회 각 부문을 지도하고 평가하는 핵심적 주체로 활동해 왔으나, 대학 자체를 평가하는 데는 썩 소극적이었다. 서구의 대학은 최근까지도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小數精銳教育(elite education) 제도를 유지해 왔고 또 각 대학은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받아 왔기 때문에 大學教育의 責務性과 卓越性에 관한 평가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탁월성 보장이 문제시되지 아니했던 서구 국가에서와는 달리 大學教育의 大衆化가 이루어져 3천 개 이상의 中等교육기관이 설립된 미국에서는 모든 대학의 質的 水準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여건과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여 公的으로 認定해 주기 위한 大學評價認定制(accreditation system)가 발달되었다. 미국의 대학평가인정제는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대학사회의 自律的 制度이나, 정부는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대학을 선별하고, 재정 지원의 效率性을 제고하는 데 이러한 평가결과를 활용해 왔다. 미국의 대학평가인정제는 6개의 지역별 評價認定機構에서 대학의 운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機關評價(institutional accreditation)와 學問領域別 評價機構에서 영역별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專門分野評價(specialized accreditation)로 구분된다. 미국 대학의 평가인정제도(accreditation system)는 미국 교유의 대학평가제도로 이와 유사한 평가

제도를 채용하는 나라는 미국 이외에 필리핀과 우리나라 정도뿐이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학평가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오일 쇼크 등에 의해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나, 고등교육 인구가 계속 팽창되어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大學教育財政의 대부분을 國庫에서 부담해온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는 국가의 대학교육 재정 지원의 效率性을 높이고, 아울러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보장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大學評價制度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1985년에 대통령 직속의 大學評價委員會를 설치하여 이미 전체 대학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영국에서는 UGC(University Granting Committee)를 UFC(University Funding Council)로 개편하면서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大學評價를 강화하였다. 또한 호주의 연방교육부(Department of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DEET)는 국가의 산업발전과 관련이 큰 대학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각 대학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法制化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大學評價制度는 지난 반세기의 대학 역사에서 몇 차례의 변천을 겪었다. 이 제도의 시대적 변천은 1950년대의 自由放任的 評價期, 1960년대의 監查的 評價期, 1970년대의 實驗大學 評價期, 1980년대의 大學 自律 評價期 및 1990년대의 大學評價認定期로 大別할 수 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 약 70개의 대학들이 설립되었으나, 정치적 혼란과 6·25 전쟁으로 인하여 1950년대 초까지는 정부가 대학을 관리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의 문교부는 1955년에 제정·공포한 ‘大學設置基準令’ 등 대학을 지도·감독할 법적 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으나 대학의 이념, 교육과정, 교수, 시설, 운영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大學評價는 거의 自由放任의 상태로 방치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 직후 군사정부는 졸업생에 대한 學士考試制, 大學入學豫備考試制를 도입하고 대학 입학 정원을 철저히 규제하는 등 일련의 대학 통제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1961년에는 71개에 달하는 4년제 대학을 41개로 정비하였으며, 12개의 초급대학을 27개로 늘리고 10개의 교육대학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대학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大學敎育의 改革이 합리적인 평가에 바탕을 두지 않아 대부분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으며, 이 당시 정부의 대학에 대한 평가는 行政 監査의 형태로 진정한 의미의 대학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대학 설치, 학생 정원 관리, 신입생 선발, 총·학과 교수 임용, 재정 운영 등에 있어서 대학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으나, 이러한 통제와 함께 대학의 자율적 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實驗大學制度를 도입하였다. 1973년에 도입된 실험대학 제도는 大學評價認定制(accreditation system)의 특성을 지닌 대학평가에 의해 自律的 力量이 갖추어진 대학을 선정해 대학 운영의 부분적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였다. 實驗大學 評價는 교수들의 협조를 받아 당시 문교부 주도 아래 수행되고, 실험대학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각 대학(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대학평가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단행된 일련의 교육개혁 조치와 1982년 大敎協의 설립에 따라 당시 문교부 주도 아래 실시되던 官 주도 대학평가제가 대교협의 회원대학인 전국의 4년제 대학을 평가하는 自律的 評價制로 전환되었다. 대교협은 지난 10년 동안 대학의 전반적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機關評價’와 교양교육, 공학계, 사범계 등의 ‘學問領域 評價’를 실시해왔다. 대교협의 대학평가에서는 대학 교수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각 대학이 自體評價研究를 통하여 작성한 각 대학별 평가보고서를 접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서면 및 방문평가를 실시하였다. 대교협의 대학평가는 大學人에 의한 자율적 평가로 대학 운영체제를 자체 점검토록 하고 동료 교수의 전문적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는 獎學的 評價의 성격이 강했으며, 평가결과가 정부의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자료로 활용되지는 않았다.

한편, 1987년 12월 교육개혁심의회는 정부에 ‘大學評價認定制’ 도입을 건의하였고, 교육부는 대교협의 시행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1991년부터 대학평가인정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의 추진 시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대학측의 의견에 따라 大學綜合評價認定制는 대교협의 ‘大學綜合評價’를 전환하여 1996년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우선 ‘學科評價認定制’를 1991년에 도입하여 10년 주기로 시행하기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물리학과’와 ‘전자공학과’가 1992년도 評價對象學科로 선정되어 전 대학의 비상한 관심 아래 두 학과의 評價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가 1993년 3월에 발표되었다. 또한 1993년도의 평가대상 학과로 ‘화학’과 ‘기계공학과’가 선정되어 현재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3. 현행 大學評價認定事業의 개요

현행 대학평가 중 大學綜合評價는 대교협 주관하에 전 대학을 5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제 1주기 평가를 실시한 후 1987년에는 제 2주기 평가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제 2주기의 종합평가가 실시되었다.

교육부는 1996년부터 대교협의 종합평가 제도를 大學綜合評價認定制로 바꿀 예정이었으나, 대교협의 大學評價委員會와 理事會는 이 제도의 도입 시기를 1998년 이후로 미룰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1994년부터 대학의 自律權 부여를 위한 대학 종합평가를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대교협에서는 1993년도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1994년 이후의 大學綜合評價認定 體制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각 대학의 보다 큰 당면 관심사는 지난 1년 동안 전국 54개 대학의 물리학과와 45개 대학의 전자공학과를 대상으로 실시된 ‘學科評價認定制’이다. 현행 학과평가인정제의 경우, 대교협은 관련 학회의 지원을 받아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이 기준에 의해 대학

자체 평가연구를 실시한 다음 평가단의 서면평가와 현지 방문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 평가 결과는 이의심사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보고되며, 교육부는 대학교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행·재정적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992년도의 물리학과와 전자공학과 평가결과는 대교협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교육부와 대교협의 합의에 의해 1993년부터는 대교협에 설치된 '大學評價認定委員會'가 평가결과의 심의 및 발표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현재 4년제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의 종류는 500여 개에 달하며, 만일 모든 학과를 10년 주기로 평가한다면 매년 50개 이상의 학과를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대교협과 교육부는 이들 전체 학과 중에서 설치 후 5년이 경과되고 전국적으로 10개 이상의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만을 평가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제한에 따라 평가 대상 학과의 수가 약 100개 정도로 대폭 줄어들었다. 또 이 100여 개의 대상 학과 중에서도 첨단기술의 육성과 관련이 많은 이·공학계 학과와 국가의 산업발전을 선도해야 할 학과 및 자재증이 수여되는 사범대, 약대, 의대 등 전문교육 실시 학과를 우선적으로 평가하기로 하였다.

학과평가의 評價認定基準은 관련 학회의 협조를 받아 대교협에서 개발하며, 1992년도 물리학과와 전자공학과의 평가기준은 학과목표,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설비, 경영·재정의 6개 評價領域과 100여 개의 評價項目으로 되어 있다. 각 평가 항목은 'A, B, C' 3단계의 평점이 부여되며, 평가영역별 평점은 평가항목의 加重値를 반영하여 산출한 평가항목별 평점을 합하여 얻는다. 또한 학과의 평가 결과는 학부와 대학원으로 구분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의 명단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4. 大學評價認定制 定着의 과제

우리나라의 대학은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21세기에 선진 10대 국가의 진

입을 지향하는 국가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大學教育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더욱이 대학교육의 質的卓越性과 함께 대학 운영의 自律性과 效率性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대학사회는 大學評價認定制를 정착시켜 이러한 대학 발전을 점검하고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92년에 처음 실시된 학과평가인정제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려 있으나, 종합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편이었다. 그러나 갖 도입된 현행 평가인정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교육 관계자들 사이에 평가의 필요성, 평가의 목적과 기능, 평가 내용, 평가 절차,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제고와 합의의 확산이 요구된다. 이제부터 우리나라 대학의 평가인정제 정착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대표적인 爭點과 課題를 평가의 목적, 주체, 대상, 내용과 기준 및 평가결과의 처리로 나누어 논의해 본다.

1) 評價認定의 目的

교육부와 대교협은 현행 學科評價認定制의 목적을 "평가 대상 학과를 설치한 대학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여건을 개선하고 학과 교육의 質을 향상시키며, 각 대학이 比較優位學科를 중심으로 특성화 발전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또 이 제도의 도입은 평가 대상 학과, 그 학과의 학생, 평가 대상 대학, 사회, 대교협 및 정부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평가인정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와 같은 평가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대학사회의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 ① 評價對象學科 : 학과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해당 학과 학문의 수월성을 유지·향상시킨다.
- ② 評價對象學科의 學生 : 질적 수준이 높은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③ 評價對象大學 : 해당 학과의 보편적 기능과

역할의 수행은 물론, 자율적으로 그 특수성과 독자성을 발전시켜 개성있는 학과로 성장하도록 자극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 ④ 社會 : 대학의 공익성과 책무성의 확인을 통하여 사회가 대학을 신뢰하고 대학의 권익을 인정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 ⑤ 大教協 : 평가기준과 지침의 개발을 통하여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고 협동적 장학활동을 함으로써 회원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을 도모한다.
- ⑥ 政府 : 개별 대학으로 하여금 교육과 연구 및 봉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자구적 노력을 유도하고, 각 대학에 적절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우수한 교육여건을 조성한다.

2) 評價認定의 主體

대학평가의 주체는 대학과 정부로 대별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獨自의 評價認定機構가 대학평가의 주체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따라 대학, 정부, 산업체,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大學評價認定委員會가 1993년 4월에 발족되었다. 이 위원회는 대교협이 병설 기구로 설치되었으며, 대교협의 評價管理部가 평가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위원회와 평가관리부의 운영비는 대교협에서 부담하고, 평가인정사업의 경비는 국고 지원을 받도록 하였다.

대학평가인정위원회의 발족은 우리나라 대학평가제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評價主體가 보다 합리적·객관적인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운영비를 국고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며, 대학평가의 연구와 실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국의 인력이 대폭 보강되어야 한다.

3) 大學評價 對象의 類型

대학평가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단위 교육 기관인 개별 대학(교)이며, 그 대학의 교육·연구·사회봉사 기능의 수행 실태와 이 기능의 지

원을 위한 대학 운영 실태를 평가해 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러한 機關評價(institutional accreditation) 이외에 의학, 법학, 교사교육과 같은 專門教育(professional education) 프로그램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專門分野評價(specialized accreditation)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여 년 동안 대교협이 주도한 대학평가에서 미국의 평가제도에 바탕을 둔 機關評價와 學問分野別 평가를 실시해 왔다. 최근 이들 평가는 大學綜合評價와 學科評價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1991년에 도입된 평가인정제에서도 대학평가의 유형을 學科評價認定制와 綜合評價認定制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당분간 우리나라의 대학평가인정제는 위의 두 가지로 나누어 실시될 전망이다.

그러나 학과평가인정제의 경우, 평가대상을 大學의 學科로 한정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우리나라 대학에는 현재 500종 이상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만일 이들 모두를 10년 주기로 평가한다 해도 매년 50종 이상의 학과를 평가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한 학과의 평가에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 매년 2~3개 정도의 학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학과 단위의 평가가 거의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교협에서는 전국에 걸쳐 10개교 이상에 설치된 學科 중에서 이·공계 학과와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학과 등을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학과의 단위를 學問系列로 확대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보다는 기계공학계 학과를 평가하면 평가대상 학과수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의과대학이나 교육대학원과 같이 광의의 학문계열별 평가도 가능하도록 학과평가를 '學問領域別評價'나 '프로그램 평가' 등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4) 評價의 內容과 基準

대학평가에서는 교수·시설·재정 등의 投入變因, 졸업생의 취업률·교수의 연구실적과 같은 產出變因, 수업의 질·재정 운영의 효율성

등의 過程變因이 주요 평가내용이 된다. 이러한 평가내용은 大學教育의 質(quality) 또는 卓越性(excellence) 측정이 가능하도록 操作化(operationalization)한 것으로, 現행 평가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미국 대학의 평가기준과 유사하게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수, 학생, 시설·설비, 행정·재정의 6대 항목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보다는 대학의 기능에 바탕을 둔 교육·연구·사회봉사과 같은 항목으로 범주화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평가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항목화해야 할 것이며, 평가항목을 필수항목과 보조항목으로 구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항도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교수확보율, 시설 확보율 등은 필수항목으로 하고 10개 내외의 필수항목만으로 평가기준을 작성할 것인지 아니면 교수의 처우, 학생의 후생시설 등과 같은 보조적인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100개 정도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작성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어 있다.

또한 각 평가항목별 평가 결과가 합격/불합격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A, B, C 등과 같은 몇 단계의 등급으로 판정해야 할 것인지도 쟁점이 되어 있다. 이와 함께 한 대학교 또는 한 학과가 평가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들 평가항목 중 몇 퍼센트 이상의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하는지와, 평가인정의 수준이 우수대학이나 우수학과를 가려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 여건을 구비한 대학을 가려내기 위한 것인지도 대학평가 관계자들이 합의해야 할 사항으로 남아 있다. 또 재정 여건이 다른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똑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5) 評價結果의 處理

1992년도에 물리학과와 전자공학과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學科評價認定제에 의한 평가결과가 1993년 3월에 공표되었다. 대학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한 대학의 명단을 발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 역사상 획기적인 일이었으며, 이에 대한 자계의 반응도 다양

했다.

우선 평가인정제의 기본적 특성을 인식하지 못한 일부 언론계에서는 대학의 序列을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으며, 일부에서는 교육과 연구 여건이 매우 미흡한 대학의 명단이 아울러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평가인정제의 속성상 평가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시 평가결과를 몇 단계의 수준 또는 몇 개의 영역으로 구분해야 할 것인지와 공개의 범위는 지속적인 논쟁점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한편, 대학이나 학과의 評價認定 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평가인정제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대학의 설립이나 학과의 설치에 상당히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대학과 학과를 평가인정제에 의해 평가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의 의문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평가의 결과를 정부의 대학에 대한 行政的 自律權 부여와 財政的 支援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평가인정제 도입의 기본적인 취지가 도전을 받고 있다. 즉, 평가결과를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연계시킬 경우 여건이 우수한 대학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貧益貧 富益富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들어 많은 대학이 이러한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 대교협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대학으로 판명된 대학에는 報償的 지원, 미흡 판정을 받은 대학에는 助成的 지원을 한다는 다소 공색한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따라서 大學評價認定委員會는 앞으로 대학평가인정의 결과를 정부의 재정 지원에 얼마나 또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학사회의 합의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평가 결과로 당연하게 드러날 열악한 대학교육 여건에 관한 실태를 정부와 산업체에 대해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한 客觀的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대학사회의 공동적 노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5. 結 言

우리나라의 大學敎育은 불과 반세기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양적 발전을 이룩했으며, 국가의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21세기 초까지 선진국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학제정 확충, 대학의 자율성 신장, 대학교육의 국제화와 함께 大學評價體制 강화가 대학교육의 획기적인 質的 발전의 필수적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사적으로 1990년대는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의미 깊은 시기이며, 대학사회는 21세기의 문턱에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 구상을 하고 있다. 현재 많은 논란 속에 추진되고 있는 大學評價認定제도 우리나라 대학교육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대학교육 정책이 될 것이다. 모든 대학교육 관계자들이 합리적인 大學評價制度의 定着을 통

하여 우리나라 대학교육을 발전시키는 과제가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교육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할 때 지나친 기대를 하고, 기존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보다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대학평가인정제는 제대로 정착된다면 우리의 대학발전을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대학교육제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대학교육의 탁월성 제고,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신장 및 국제화를 촉진시켜 주는 '영양제'이지 결코 이들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 대학사회는 대학평가인정제에 대한 지나친 회의와 기대 모두를 피하고, 이 제도를 대학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하려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인식을 다져야 할 것이다. ■